

中企 다니는 20대 여성은 왜 권영국에 투표했나

에스프레소

조귀동

경제 칼럼니스트



고마운 분이 사무실 편환을 내주어 일주일에 며칠은 영등포구의 한 지식 산업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파 트형 공장이라는 옛 명칭이 무색하게 젊은 여성이 동년배 남성 이상으로 많다. 점심시간이 되면 오래전 공장이 빼곡했던 골목 식당에 해사한 청년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다. 밀크티나 커피가 맛있다는 카페들이 속속 들어서며 거리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AI·위성 등 첨단 분야 스타트업, IT 대기업의 계열사는 물론 콘텐츠, 디자인,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 지식 서비스 업종이 많다. 이곳에 와보니 ‘산업 도시 서울’을 누가 떠난 치고 있는지 잘 알게 됐다.

통계는 20~30대 여성들이 수십 년 전 이곳에 있던 그도래 여공이 했던 역할을 이어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4월 서울에서 18~34세 고용보험 가입자는 여성이 83만1000명, 남성이 67만9000명이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여성(30만8000명·여성 37.1%)이 남성(22만1000명·32.5%)보다 꽤 높은 비율로 많다. 비수도권 지역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상경하고, 다수가 중소기업에 다니기 때문이다. 청

년층 첫 일자리를 지역별로 쪼개보면 서울(27.0%)의 비율은 경기도(24.4%)를 앞선다(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기준).

하지만 이들이 서울에서 ‘산다’고 말하긴 적잖이 애색하다. 지금은 근처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머무르다,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면 경기도 베드타운으로 이주하는 게 일반적인 궤적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치솟은 자산가격을 따라잡기엔 소득이 턱없이 부족하다. 영등포동, 당산1동, 양평동 일대에는 청년이 거주하는 원룸과 노년기에

권 득표율 1% 미만, ‘이대녀’는 5.9% 영등포·당산 등 원룸촌서 높아 국힘과 민주, 장·중년 자산층 주도 자산 없는 청년 불만 투표로 보여

머무르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함께 있다. 문래동, 신길 3~5·7동 같은 아파트 밀집지의 주류가 40~50대인 것과 사뭇 다르다. 영등포구의 북도식 아파트 지식산업센터에서 일하는 20~30대의 소득으로 언감생심이다.

이번 대선에서 상당수의 젊은 유권자가 4번이나 5번을 찍은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60~70년대생과 40~50년대생 고자산 계층이 주도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20대 여성의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총선 대비 0.1%포인트(지상과 3사 출구조사 기준) 느는 데 그쳤다. 대선

권영국 민주당 후보에게 5.9%가 표를 던졌다. 권 후보(0.98%)가 1992년 백기완 민중당 후보(1.00%)의 득표율에 못 미칠 정도로 참패했다는 걸 감안하면, 젊은 여성의 표심은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을 의미할 것이다.

영등포구에서 권 후보가 득표를 많이 한 곳은 한결같이 앞서 거론한 원룸·오피스텔 밀집지다. 서울 전체를 봐도 대학가나 성산동 같은 진보 강세 지역을 제외하면 1인 가구 집중 거주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명문대 바로 앞 지역을 빼면 가산동(구로구), 독산1동(금천구), 영등포동같이 청년 남성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평창동, 압구정동, 한남동 같은 부유층 거주 지역에서는 도리어 민주당 초강세 지역 수준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2017년 대선에서 개혁 보수를 표방했던 유승민 후보가 해당 지역에서 득표율이 높았던 것과 확연히 다르다.

20대의 투표 행태는 성별, 계층, 학력을 떠나 불만이 팽배해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이름 없는 기업에서 일하며 주소지만 서울일 뿐, 실상은 서울에 고용된 존재로 살아가는 다수의 청년들까지 정치적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몇몇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 연금·센터 같은 의제에 매몰된 결과로 폄하할 수 없는 이유다. 기존 정당이 현상 유지에 급급한다면, 다음번 선거에서 90~00년대생들이 만들어낸 정치적 충격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85]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실제로 보면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직접 찾아가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으나, 겸재 정선(謙齋 鄭敼·1676~1759)의 ‘금강전도(金剛全圖)’는 지금 용인 호암미술관에 가면 볼 수 있다. 젊은 시절부터 금강산을 두루 다니며 많은 그림을 남겼던 화가가 직접 쓴 제화시(題畫詩)에서도 ‘제 발로 밟아보자면 이제 두루 다녔아 할 텐데, 이렇게 머리맡에 그림을 두고 싶겠보는 게 낫겠다’ 고 했으니 위안이 될 것이다.

교과서는 물론이고 각종 화집에서 술하게 봤던 ‘금강전도’지만 실물을 눈앞에 두면, 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그림 구석구석의 세부 묘사에 감탄하게 된다. 마치 드론을 띄운 듯 내금강의 웅장한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원형 구도를 멀리서 한번 보고 가까이 가보자. 제일 아래, 금강산 초입의 장안사 앞 비룡교에서 계곡을 따라 산행하듯 천천히 시선을 위로 옮기면, 왼쪽의 표훈사를 지나자마자 그림 한가운데다. 여기 여러 갈래의 물이 하나로 합수되어 내려오는 만폭동이 있다. 만폭동에서 물줄기를 따라 왼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침엽수가 빼곡한 휴산이 나오고, 오른쪽으로는 깎아지른 듯 날카로운 화

강암봉들이 늘어섰다. 푸른 휴산이 완만하니 왼쪽으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암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탄 자바위와 마주친다. 더 올라가면 꼭대기에 정양사가 있고, 그 너머로 금강산의 주봉인 동그런 비로봉이 우뚝 솟았다.

르네상스 이래 서양화의 규범이 된 선(線)원근법은 고정된 시점에서 세계를 재현하려는 인간 중심적 체계다. 반면 ‘금강전도’는 ‘와유(臥遊)’, 즉 시공을 초월해 산속에서 걷고 머무르고 사유하는 체험의 공간이다. 이 차이는 단지 그리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자연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거닐 것인가를 가르는 더 깊은 물음이다.



정선, 금강전도, 18세기 중엽, 종이에 수묵 담채, 130.8×94.5cm, 개인 소장.

포스트텍 교수·서양미술사

社 説

한일 정상도 통화, 외교 첫 단추 잘 끼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에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당국 간 의사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트럼펫 미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두 번째 정상 간 통화를 일본 총리와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 중 어느 나라 정상과 먼저 통화를 하는지는 항상 주목을 받았다. 그것이 새로 출범한 정부의 외교적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잣대처럼 돼 있는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보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먼저 통화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에게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북·중·러가 밀착하는 현 정세 속에서 한

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을 한국과 가장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일은 경제나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일본과 관련한 발언의 진폭이 너무 커서 진의가 불확실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이라고 했고, 2022년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가 이런 과거 발언에 대한 미국 등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한일 관계의 부침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구태도 없어져야 한다. 이 대통령의 외교는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평가한다.

李 재관 무기 연기, 대통령 면죄법들은 철회돼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 고법 제 판부가 18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사실상 무기 연기했다. 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내란 등을 제외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됐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재판 연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했다면 유죄 선고가 됐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선거법 사건 외에도 대장동, 불법 대북 송금, 위증고사, 법원카드 유용 등이 대통령의 나머지 네 재판도 모두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대통령 재임 중 5건의 재판이 모두 중단된 것이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재판들은 대부분 사안이 중대하고 유죄 여부가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관련돼 있다. 서울 고법의 재판 연기는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지위를 중도에 박탈하는 것에 대한 혼란까지 고려한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 사법부가 엄밀한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를 생각한다는 비

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거나 무죄를 받기 위해 무리한 입법을 시도해왔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을 없애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도 추진했다.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특정인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 이런 법안들을 추진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번 재판 무기 연기를 계기로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철회해야 한다. 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보복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도 철회하고 대법관 증원법도 국민적 동의 속에 절차를 밟아 추진해야 한다. 군사 작전처럼 처리할 사안들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안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법을 개정해 썬키를 막겠다는 것이다. 대선 출구조사에서 국민의 64%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도 절반이 같은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재판을 무기 연기했으면 민주당도 상식 밖 폭주를 멈춰야 한다. 이와 같은 법도 아닌 법을 실제로 통과시키면 두고두고 민주당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상법 개정 강행, 기업에도 표 많으면 이렇게 무시하겠나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총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한다. 이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보다 더 강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사의 총실 의무 대상 확대, 집중 투표제 활성화 외에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고, 법 시행을 ‘1년 유예’에서 ‘공포 즉시 시행’으로 바꿨다.

기업들은 경영 활동 위축, 배임 소송 남발 부작용과 함께 행동주의 펀드 같은 기업 사냥꾼이 경영권을 위협할 위험성 등을 들어 상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새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1400만 개인 투자자도 지지하고 있어 상법 개정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증시가 연일 급등하는 것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기업 이사회가 대주주 편에만 서서 소액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사례가 잦았던 것이 사실이다. ‘중복 상장’ ‘쪼개기 상장’ 등이 한 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

를 이렇게 무시해도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전부 밀리면서 기존 사업을 재편하고 새 성장 모델을 찾아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상법 개정에 따라 소송이 무서워 인수·합병(M&A)과 신규 투자를 주저하면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나.

상법 개정을 하려면 기업의 합리적 객정도 떨어줄 보안 입법이 수반돼야 한다. 경영권 방어를 돕기 위해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포이즌 필(대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 발행), 차등의결권(특정 주주의 주식이 더 많은 의결권 부여), 황금주(거부권을 가진 주식)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중이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하나도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제안했듯이,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대한 배임죄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 규제 입법은 너무 쉽게 통과되고 노조 개혁 입법은 모두 막힌 지가 오래 됐다. 한쪽엔 표가 없고 한쪽엔 표가 많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부작용을 낳는다.

이재명이 대통령인 세상

지금까지와 전혀 달리 전개될 현실 다섯 가지

뉴데일리
newdaily.co.kr

- ① 자유민주주의, 원형 그대로 지속 가능?
- ② 원론적 시장 자유주의의 앞날은?
- ③ 한미 동맹, 한일 협력, 인도 태평양 자유국가 연대는?
- ④ 계층적·이념적 갈등, 더 험한 모습으로 증폭?
- ⑤ 권위주의·공안통치 폭주?

가보지 못한 세상

오늘 2025년 6월 4일을 고비로 **전혀 새로운 현실**이 전개될 것이다.

① **자유민주주의**가 원형 그대로 지속 가능할지? 이를 대체해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가 등장할 것이다. 이에 대해 그걸 자초한 국민이 어떻게 느끼고 반응할지 자못 흥미롭다.

② **원론적인 시장 자유주의**의 또한, 원형 그대로 지속 가능할지? 특히 대기업 위주 경제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 다수 국민은 당장엔 퍼주기 선심 정책을 반길 것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는 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리스-베네수엘라 경제가 그렇게 파탄 나지 않았나?

③ **한·미 동맹과 한·일 협력, 인도 태평양 자유국가 연대**도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태도 역시 더 호전적이고 고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대남공작 강화로, 중국은 정보정치 방식**으로 이들 선택한 국민이 답해보라. 한·미 동맹 시대보다 나을까?

④ **우리 사회에 팽배한 계층적·이념적 갈등**은 더 험한 모습으로 증폭될 것이다. 중앙정치·지방정치·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내전》이 격렬하게 파급될** 것이다. 일부가 외치는 **《사회 대개혁=체제변혁》 폭풍이 격렬하게 불어닥칠** 것이다. **각계각층에서 보복·용정·제거의 지진이 일 수도** 있다.

⑤ **정치·사회 분위기는 갈수록 《권위주의·공안 통치》**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일부 국민은 **《팬덤 정치》**의 광기를 더할 것이다. **고학력자가 많다는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본격적인 《홍위병 정치》가** 닥칠 수 있다.

수업료, 너무도 비싸고 치명적

그렇다면? 오늘의 중추 한국인 세대(4050 등)는 그들의 윗세대와 달리 빈곤이 뭔지 모른 채 살아온 세대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전혀 모른다. 이전 공정하지 않다. 그들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직접 해 봐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새 집권층에 바란다. **《안일(安逸)한 한국인》들에게 《선행 훈련》** 좀 시키라고, 그들에게 **《집단주의 체제》**의 매운맛·쓴맛을 제대로 보여주라고.

이 점에 관한 한 잘~한다고 해 줄 것이다. 보수 윗세대가 이렇듯 폭삭한 이유는 결국, 후대(後代) 교육을 잘못시킨 탓이기에.

보수 안 배신세력의 장난질

그리고 새 권력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보수 안의 양다리 짚는 자》**들의 장난질 또한, 큰 보탬이 되었을 것.

그러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권유한다. **《그들을 봐주지 말고 매몰처게 내치길》**.

《기획주 의자》들은 봐주면, 언젠간 그쪽에도 등 돌릴 터. 이들은 언론에도 많다. Bye.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6월 4일 게재 되었습니다.

